

문화와 지역경제

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지역간 연계·협력의 확대 필요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이다.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층별 연계·협력의 확대이다. 광역경제권은 지역경제의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초광역개발권은 지역경제의 협력이란 그동안 지역경제의 단위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상호 연계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치단위인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위인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의 통합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II.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실태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정책의 권역유형별로 시범공모사업의 형태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총 62개 사업에 대해 1,8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67개 사업에 대해 1,4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시·도의 1차 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친 후, 관계부처가 연계협력도,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

지역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후방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위원회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평가, KIAT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마다 사업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편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서남해안 인접 시군,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군)	-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48억원 (6개, 신규 1개)	215억원 (9개, 신규 3개)	광역계정
계	607억원 (35개)	1,231억원 (62개)	1,488억원 (67+α)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과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인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서 지역별의 의한 지역발전은 사실 미흡한 실정이나 계획수립과 집행의 불일치 때문에 합의형 지역개발사업의 선정과 집행의 불일치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 태 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내 20여개의 광역협력 사무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